

친환경농산물 소비패턴의 결정요소와 확대방안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Determinants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onsumption Pattern and Expansion Plan

*Seong-Bo Ko

*Dept. of Industrial & Applied Economics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패턴의 결정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비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 방안을 요약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운명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손에 달려있고(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형태임),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 및 이에 대한 생산(인증제도의 보완포함) 및 유통단계에서의 보증(농축산물의 안전, 안심 생산 및 유통시스템), 높은 가격프리미엄의 인하와 시장접근성의 확대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 있다.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17년 현재 유기농산물 1,464ha, 무농약농산물 924ha 등 총 2,388ha로 전국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 80,114ha의 3.0%, 제주도 총경지면적 61,088ha의 3.9%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전라남도의 전국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 대비 점유비 52.9%, 전남 총경지면적 293,863ha의 14.4%와 비교하면 2008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시범도”를 선포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초라한 실적이다.

1. 서론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토양오염, 식품안전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환경친화적 농업(친환경농업의 법률적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1991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2009년의 거의 1/5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결정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의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친환경농업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패턴의 결정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비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으로 2001년 8.7만톤에 머물렀던 것이 연평균 26.5%씩 증가해 2009년 235.8만톤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 이후 저농약농산물의 대폭적인 감소와 잔류농약, 식품안전사고 등이 빈번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들간의 신뢰수준의 저하로 인해 2017년 현재 49.6만톤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는 2009-201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감소율은 무려 -16.1%에 달

[표 1]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의 전국대비 점유비

구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천ha)			전국대비 지역 점유비(%)		지역별 총경지면적대비 인증별 점유비(%)		
	제주도	전남	전체	제주도	전남	제주도	전남	전체
계	2.4	42.3	80.1	3.0	52.9	3.9	14.4	4.9
유기	1.5	7.9	20.7	7.1	38.3	2.4	2.7	1.3
무농약	0.9	34.4	59.4	1.6	57.9	1.5	11.7	3.7

자료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2019).

3. 친환경농산물의 특징과 구입시 애로사항

친환경농산물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의 품질 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신뢰재로 정보의 비대칭적(information asymmetry)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전 또는 구입후에도 해당 품목이 가진 기능이나 효용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농산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생산자만이 알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관련정보는 불균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의 상품특성으로 인해 생산자는 비용은 적게 들이고 높은 값을 받기 위해 “거짓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혹시 “속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구입 여부와 지불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5].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생산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친환경농산물시장이 ‘레몬’시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혹은 안전·안심 보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동기를 살펴본 결과 1순위로 ‘안전성 및 가족건강’이 88.3%로 대다수가 선택하였으며,다음으로 ‘구색(2.8%), 인증제도 신뢰(2.5%)’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친환경농식품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친환경농식품 구입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향후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으나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 가격 프리미엄은 67~87%,적정 프리미엄은 42~54%로,약 20%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낮춘다면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최근 5개년간 조사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살충제 계란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의 영향으로 국가인증제도 신뢰도가 사상 처음으로 60% 이하로 추락하여, 2017년 신뢰도는 54.5%로 발표되었다.[4]. 이는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식품산업의 성장에 매우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신뢰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

[표 2] 5년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신뢰도 조사(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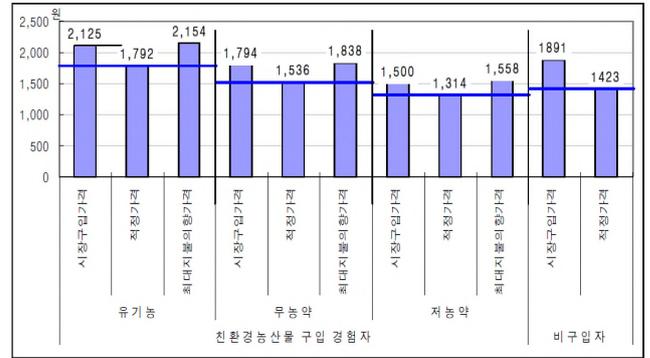
구분	신뢰도	매우 신뢰함	약간 신뢰함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2013	66.4	10.6	55.8	22.8	10.1	0.8
2014	70.1	17.2	51.8	25.5	5.3	0.2
2015	68.3	14.8	51.3	26.8	7.1	0.2
2016	71.5	14.3	62.3	18.8	4.2	0.3
2017	54.5	3.3	38.4	33	23.5	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5년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보고서”, 2018.

4.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수준 및 가격프리미엄분석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시장구입가격과 적정가격, 최대지불의향가격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소비자 시장구입가격과

최대지불의향가격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최대지불의향가격 수준에서 가격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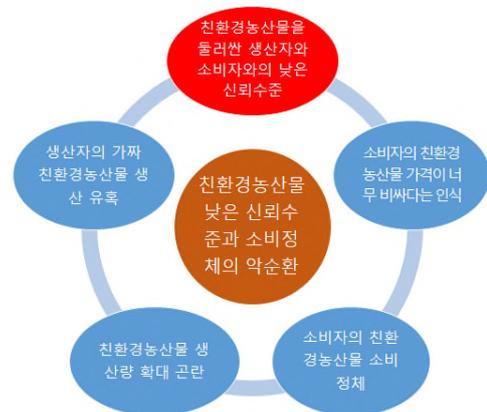


[그림 1]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 및 최대지불의향가격[1]

5.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 모색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관련 소비자의 소비실태, 생산현황, 친환경농산물의 속성별 기여도 및 가격,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해 2017년 54%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요한 keyword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재의 상품적 속성(특성)과 관련된 안전성과 신뢰도의 문제, 친환경농산물 구입시 애로사항과 관련된 높은 가격프리미엄의 문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 정보의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즉 문제의 본질은,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반농산물 대비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높지 않고, 이는 친환경농산물소비자는 가격수준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해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다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확대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2]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 및 최대지불의향가격[저자작성]

다시말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운명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손에 달려있고(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형태임),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 및 이에 대한 생산(인증제도의 보완) 및 유통단계에서의 보증, 높은 가격프리미엄의 인하와 시장접근성의 확대에 요약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신뢰수준을 높인다는 기본전제하에서 가격프리미엄을 하향 조정하고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된다.

우선 식품안전성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농축산물의 안전, 안심 생산 및 유통시스템은 농·감협 등의 유통주체들이 농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잔류농약검사 등 식품위해요소를 체크해서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것을 체크하고, 만약 식품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는 보증시스템을 도입하면 생산자-식품안전센터-유통책임자-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어 기존의 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농축산물의 안전, 안심 생산 및 유통시스템 개념도(저자작성)

두번째로 현재 소비자의 구매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현재의 생산비용으로 많은 생산량을 산출해 내거나 생산자조직의 조직화 등 유통단계의 규모화를 통한 유통비용의 축소를 유도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각 단계에서 가격프리미엄의 축소가 가능한 최대폭은 얼마이고 이 수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수요는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현재의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단계적으로 10%씩 하향조정할수 있는 기술수준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추가소비수요

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속성별 기여도 분석결과, 안전성이 1위, 친환경성이 2위로 나타났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동기로 ‘안전성 및 가족건강’이 59.9%로 1위이고,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공익적 가치는 연간 3조 5,7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농업의 두가지 속성중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장된다면 소비자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친환경성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바람직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 보상되지않는 비시장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GAP를 포함한 환경친화형 농업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면, 직불제 만큼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의 큰 걸림돌인 가격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창길외1, “친환경농산물의 구매형태 및 시장전망”, 『농업전망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2] 김창길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3]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2019년)
 [4] 농림축산식품부, “최근5년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보고서”, 2018.
 [5] 송양훈,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이론적 접근:신뢰제의 정보비대칭성 지표로서의 정보엔트로피 측정, 『환경정책연구』 제7권3호(통권18호), 한국환경정책연구원, 2008.